

다산포럼

‘김영란법’ 이야기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의 일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느 명절날 부친께서 술 한 병을 주시면서 담임 선생님께 갔다 드리라고 하셨다. 통칭 ‘정종’이라 불렀던 2리터짜리 청주 술병이었는데 나는 그걸 들고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께 전해드렸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살아 있는 닭 한 마리를 들고 담임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 적도 있었다. 그때 선생님 댁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동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그 시절엔 명절날 선생님에게 조그마한 정성을 표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 여겼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한 송이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쓸쓸한 사건이 있었다.

되돌아온 책

나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이 다니는 두 명의 손녀가 있다. 지난 10월 초, 내가 쓴 책이 출간되었기에 손녀들의 담임 선생님께 우편으로 우송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편지도 동봉했다. “OOO 선생님께, OOO 할아버지입니다. 여느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OO는 저에게 돌도 없는 손녀입니다.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OO가 착한 짓 하면 칭찬해 주시고 나쁜 짓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꾸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제가 쓴 책이 출간되어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후 책이 되돌아왔다. 담임 선생님이 손녀를 시켜 나의 며느리에게 책을 돌려보낸 것이다. 순간 나는 어땠는지 감정에 휩싸였다. 결코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쾌한 기분도 아니었다. 내가 김영란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정가 1만8000원의 책을 저자가 직접 보내는 것이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 생각했었다. 또 별다른 정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이었다. 얼마 후에 며느리로부터 들은 바로는, 두 선생님은 받은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의논한 끝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마 김영란법에 관한 매뉴얼을 검토했을 것이다. 나는 두 분 선생님의 결단을 존중하면서 김영란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고마운 선생님

꽃 한 송이도 개인적으로 선물하지 못하게 한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동안 학교를 휘젓고 다닌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거세었던가! 록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제가 쓴 책이 출간되어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후 책이 되돌아왔다. 담임 선생님이 손녀를 시켜 나의 며느리에게 책을 돌려보낸 것이다. 순간 나는 어땠는지 감정에 휩싸였다. 결코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쾌한 기분도 아니었다. 내가 김영란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

에게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지 않았을까? 은연중에 그걸 바라고 내가 책을 보낸 것이라.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나를 반성하도록 이끌어 준 두 분 선생님이 고맙웠다. 그러나 이런 반성은 지극히 논리적인 반성이고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쓸쓸한 어여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선생님께 술 한 병 갖다 드린 일과 고등학생 때 선생님 댁에 닭 한 마리 갖다 드린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엔 미풍양속이던 것이 지금은 범법 행위가 된 현실이 서글웠다.

선생님께 꽃 한 송이 드리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할 만큼 세상이 이토록 각박해졌는가. 사제(師弟) 간의 관계가 어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분한 생각도 들고 슬픈 생각도 든다. 그러나 어찌라, 현실이 그런 것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손녀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할 방법이 없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결론을 내렸다. 학년이 끝나고 졸업식을 한 후에 되돌려 받은 책을 다시 갖다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직무와 관련 없는 시기여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책 한 권 전달하는 일 외에 이렇게도 어려운가.

청춘 특·특

블라인드 채용, 정교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



김명지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내년 상반기 취업 시즌을 앞두고 취업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입시지원서에 신체 조건이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선입견이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방식이다.

지난 7월 5일 정부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322개의 공공기관 전체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엔 149개의 지방 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민간기업 및 대기업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할까.

우리나라 채용 과정에서 실력 이외의 차별적 요소들이 작용되고 있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학연, 지연, 혈연 등 흔히 말하는 ‘인맥’이 대표적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필요 없다 어차피 아는 사람 뽑을 텐데~”라고 하소연을 한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아닌 인맥 등이 중시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스펙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많이 등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찬성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작업이나 의상 구입을 하는 것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꾸준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 학력과 학점을 포기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내 상품가치를 늘리기 위해 고생했는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스펙과 경험은 어떻게 쌓아야 하느냐”며 오히려 취업준비가 막대해졌다고 토로하는 취업준비생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기업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채용 기준이 불분명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블라인드 채용은 ‘암묵 블라인드 채용’이다. 불필요한 요소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요소들까지 전부 가리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공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방식 도입이다. 그러나 전공과 성적, 자격증 등 직무 관련 정보마저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마치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험에 대해 준비해오던 사람과 시험 직전 특정 과목만을 베풀기기로 공부한 사람이 같은 시험장에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직무에 적합한 인성과 열정, 태도만으로 능력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평가 자체도 쉽지 않다.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오던 사람의 노력이 묻어올 수 있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또한 자신을 차별화 하고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보여 주려 한다는 불안감에 ‘제3의 스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지 고민하며 이색적인 스펙, 독특한 경험을 위한 사실학원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스펙 경쟁을 통해 입사

한 신입 사원의 조기 퇴사율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퇴사 이유의 30%는 직무 부합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스펙 위주의 채용은 기업과 취업 준비생 모두에게 독악이었기 때문에 채용 방식의 변화는 꼭 필요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발생 가능한 잠재적 결과를 예측할 정교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각 기관 및 기업들 역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지의 역량도 점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너무 성급한 도입이 아니라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은 취업 준비생들 개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마냥 거려버리는 ‘블라인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걸러내는 ‘제’일지도 모른다. 제의 구멍은 ‘적당한 크기’여야 한다. 이 적당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社說

특별법 국회 통과 에너지밸리 날개 달았다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미래 발전의 핵심으로 추진돼 온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특별법안 국회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전남도와 한전을 주축으로 심혈을 기울여 온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이제 지역을 넘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다양한 연구기관과 관련 업체 입주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도시 도약이 가능해졌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을 중심으로 미래에너지 연구기관, 연관 기관 및 기업 등을 한 곳에 집적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당초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양 시도가 그동안 입법 예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국정 과제 포함, 협업을 통한 대정부 대응에 심혈을 기울인 데 힘입은 바 크다. 융합형 광주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 전략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밸리를 브랜드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의 메카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광주·전남도는 한전 공대를 서로 유지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양 지역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는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협력하면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사고 예방 위해 줄음쉼터 안전시설 보완을

졸음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졸리는 운전자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이 바로 줄음쉼터다. 줄음쉼터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설치 전인 지난 2010년 161건에서 2015년 115건으로 46건(28%)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줄음쉼터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 데다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도 많다. 줄음쉼터에 진입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느끼거나, 혹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줄음쉼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 줄음쉼터 출입로의 길이가 짧은 것이 주원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줄음쉼터 45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8%인 35곳은 진입로 길이, 42곳(93.3%)은 진출로 길이가 ‘고속도로 줄음쉼터 설치·

관리지침’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로가 짧은 경우 과속 진입으로 인해서, 진출로가 짧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재진입 과정에서 충분한 가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줄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31곳이나 됐다. 조사 대상 중 7곳(15.6%)은 진·출입로 폭이 기준(3.25m)보다 좁아 주차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광주·전남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줄음쉼터는 전국 235곳 중 17%(40곳)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줄음쉼터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계 부처는 안전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특화된 장소 마련도 시급하다.

無等鼓

조선 시대에 ‘신문고’란 북이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대궐 밖 문루에 달아 둔 이 북을 울리면 그 사연을 들어 해결책을 찾아 주도록 했다. 3대 왕인 태종이 처음 설치했고 이극무가 관리했다. 그러나 그 북을 함부로 치면 큰 벌을 받았고 북을 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돼 있어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역모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았고, 집안의 명이나 목숨이 걸린 누명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울릴 수 있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이 신문고에 몰려들어 관리가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 10대 왕인 연산군 때는 아예 폐지됐으며 21대 왕인 영조 때 부활했다.

엄격히 보면 신문고와 성격이 다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대판 신문고라 할 만하다. 청와대는 중증 이상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권역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25일 현재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게시판

에는 운영 2개월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 이상 넘어선 청원이 4건이나 됐다. 앞서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도 20만 명을 넘겼다.

아예 조선시대 신문고의 이름을 딴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도 있다.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청원(請願, petition)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적 기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이 신문고에 몰려들어 관리가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 10대 왕인 연산군 때는 아예 폐지됐으며 21대 왕인 영조 때 부활했다.

엄격히 보면 신문고와 성격이 다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대판 신문고라 할 만하다. 청와대는 중증 이상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권역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25일 현재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게시판

신문고와 청원

기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한동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

얼마 전 전북 고창의 한 오리 농가와 순천만 습지 야생 조류 분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안타까움과 우려를 느낄 새도 없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뛰어들었다.

하루는 시·군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한 상인으로부터 푸념 섞인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뜰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니 죽을 맛이라는 불만소리였다. 그 말은 들은 순간 명치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때는 지난 2003년이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급기야는 여러 번의 형태 변형까지 거쳐 더욱 강력한 존재가 돼 위용을 떨쳤다. 잊지 못할 2016년, 그 해에는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2000만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돼 매몰되는 일이 있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당시 농가에서는 이를 재난이라 부르며 한탄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당황스럽지 않은 손님이 올제도 여지없이 찾아왔다. 쫓을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지간히 쉬운 일이 아니다.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방도가 과연 있을까?

AI 바이러스는 전파가 매우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철새의 이동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감염된 철새로부터 농장의 가축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도는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해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거점 소독 시설 설치와 전 시·

군으로 확대하고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또한, 철새 도래지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전 시·군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그러나 AI 바이러스 문제 해결이 비단 정부와 지자체만의 몫일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노’(No)다. 축산 농가에서 나 몰라라고 방역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감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 농가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기본’을 지키려는 축산 농가의 의지, 그것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그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일종의 행동 수칙이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먼저 AI 바이러스 방역 지역에 소재한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 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해당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을 세척하고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